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4. 강동오 의원 외 5인
 - 나. 회부일자: 2025. 8. 18.
 -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9. 1.)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 배부자료로 대체】

가.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대상 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구성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확대 (안 제7조제1항)
-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3항1목)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개정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4일 강동오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현행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의원의 참여를 규정상 명문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의 “11명”을 “13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11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13명</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
<u><신설></u>	<u>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u>
<u>1. ~ 4. (생략)</u>	<u>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u>
<u>④ · ⑤ (생략)</u>	<u>④ · ⑤ (현행과 같음)</u>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를 제외한 전 구에서 구의원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 자치구에서는 2명을 참여시키고 있음.

< 서울 자치구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구의원 참여 여부 >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구성	19	9	12	9	13	13	12	11	11	15	12	9	11	13	9	20	9	8	9	9	9	11	11	9	9
구의원	2	1	2	2	3	2	2	2	2	2	2	2	0	2	3	1	2	2	2	2	3	2	4	2	2

-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재정 심의과정에서 구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 특히, 교육재정은 구민 세원을 기초로 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도 구의원의 참여가 요구됨.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교육재정 심의의 책임성 강화, 타 자치구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항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